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현황과 시사점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하고 5곡 3특 성장엔진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려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임.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거점 대학 중심의 다극화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고등교육 체계,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수도권 집중 폐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선행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문명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근대화를 달성하였고 아시아 유일의 서구 열강과 경쟁할 수 있는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였음.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서구의 선진 학문과 기술, 행정제도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근대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엘리트 관료와 기술자, 학자 등의 육성을 담당한 제국대학이었음
- 제국대학은 국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도쿄, 교토,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후쿠오카, 삿포로 등 7개 주요 거점 도시에 설립되어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고 거점화된 산업구조와 다극화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설립된 7개의 제국대학은 행정, 관료(도쿄대), 기초과학(교토대), 재료과학(도호쿠대), 조선, 철강(규슈대), 상공업(오사카대), 농업(홋카이도대), 기계, 항공(나고야대) 영역으로 특화된 특성화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서구 열강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2026년 현재 총 31명(일본 출신 외국국적자 포함)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 대부분이 물리학(12), 화학(9), 의학(6) 등 기초과학 분야 수상자임. 일본이 아시아 최다 노벨과학상 강국이 된 배경에는 기초과학과 공학을 육성한 제국대학의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일본 국립대학의 공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위상의 중요성은 이러한 제국대학 육성정책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본 이슈브로슈어는 일본 근대화의 초석이 된 제국대학의 후신인 일본 국립대학에 관하여 2004년 이후 단행된 국립대학 법인화에 초점을 맞춰 일본 국립대학 정책과 거버넌스, 대학 재정 등이 법인화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한국의 국립대학 정책 및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글로벌대학30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일본 국립대학의 역사적 변천과 법인화 개관

1949년 「국립학교설치법」 제정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미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통치 아래 과거의 군국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단행함. 신헌법 제정, 재벌 해체, 농지 개혁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미국식 고등교육 체계를 반영한 '6-3-3-4제' 학제가 도입됨
- 1949년 5월, 일본 정부는 「국립학교설치법」을 제정하여 구제국대학, 고등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준비를 단행함. 당시 일본 정부는 전국적인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1현 1국립대(一県一国立大)' 원칙을 수립하였음
- 이 조치로 인해 과거 26개에 불과했던 소수 정예 엘리트 중심의 국립대학 체제가 단숨에 72개 체제로 증설·확대되었으며, 각 지역의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학교가 국립대 교육학부로 흡수되고 교양학부가 신설되는 등 보편적 대중 고등교육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음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단행의 시대적 배경

- 1949년 신 국립대학 체제가 성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공고히 유지되던 일본 국립대학 구조는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강력한 행·재정 개혁 추진으로 큰 변화를 맞이함
- 1990년대 초 이른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은 국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과거 국가의 행정과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회적 질서를 '시장 원리와 경쟁' 체제로 변혁하려는 행·재정적 개혁을 추진 중이었음
- 고등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피해 갈 수 없었으며, 정부는 국립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대학 스스로 독립된 경영체로서 운영 효율성과 합리화를 도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막대한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 하에 2004년 4월 1일 자로 법인화가 전격 단행되었음. 이로 인해 당시 99개였던 국립대학이 89개의 국립대학법인(통폐합을 거쳐 2026년 현재는 82개 법인 85개 대학)으로 동시에 재탄생함

법인화로 인한 거버넌스 및 재무구조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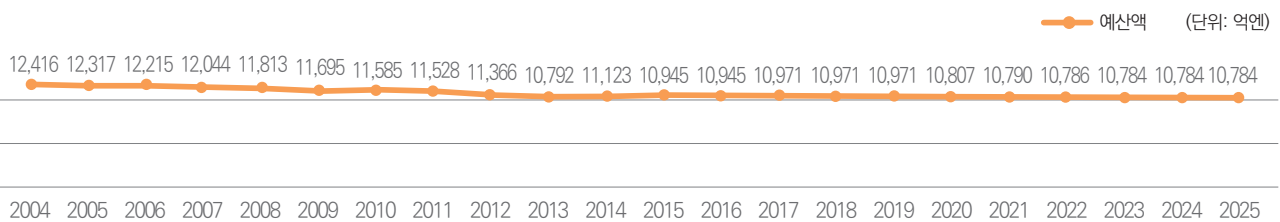
- 법인화로 국립대학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조직 및 관료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았음. 가장 큰 변화는 총장 중심의 강력한 '톱다운(Top-down)'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총장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이며, 대학 운영에 민간 경영 기법과 외부 인사의 전문성을 수용하기 위해 임원회, 경영협의회, 감사 제도를 의무화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명확히 구축함
- 기업회계기준 도입과 특별회계 폐지: 기존에 전국의 국립대학 예산을 국가가 일괄 관리하고 배분하던 '국립학교특별회계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기업의 회계원칙을 반영한 '국립대학법인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각 대학이 자율성과 자기책임 하에 예산을 요구·집행하고 자금을 독자적으로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재원의 귀속과 예산 이월의 자율화: 법인화 이전에는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업료, 입학금이나 부속병원의 진료 수입 등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으나 법인화 이후 대학의 모든 수입은 해당 대학 법인의 고유 자산이자 수익으로 귀속되었음. 특히 예산 집행 후 남은 잔여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차년도로 자유롭게 이월하여 적립하거나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대학 부지와 건물 등의 국유재산 역시 대학 법인의 소유 자산으로 승계되었음

Ⅲ. 운영비교부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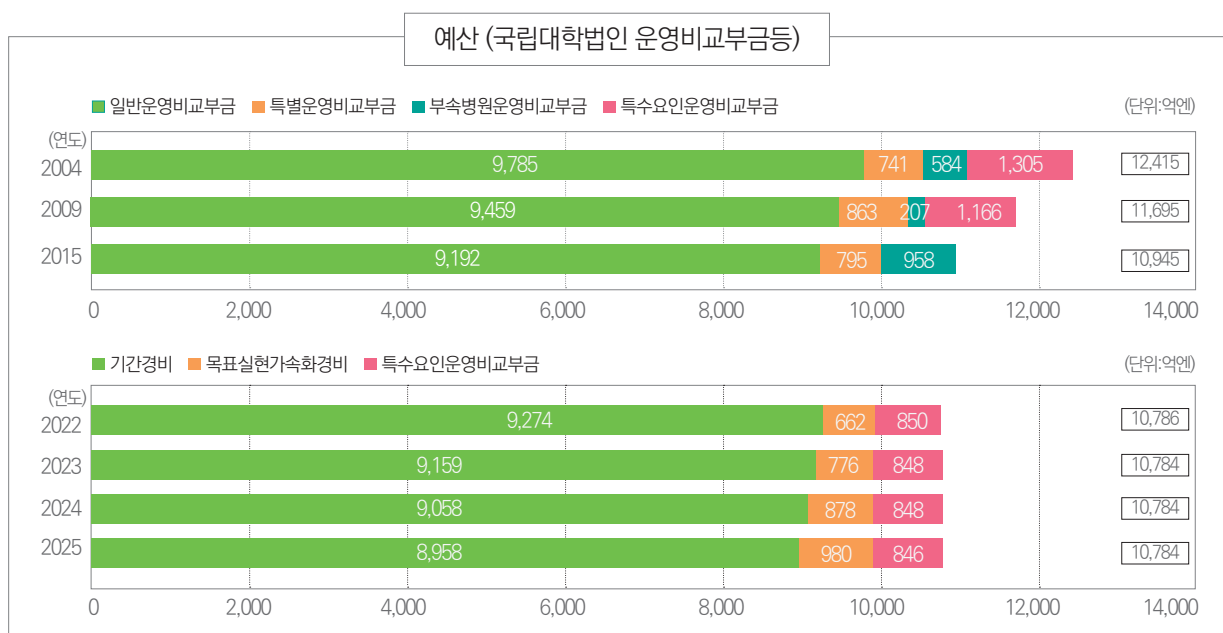
운영비교부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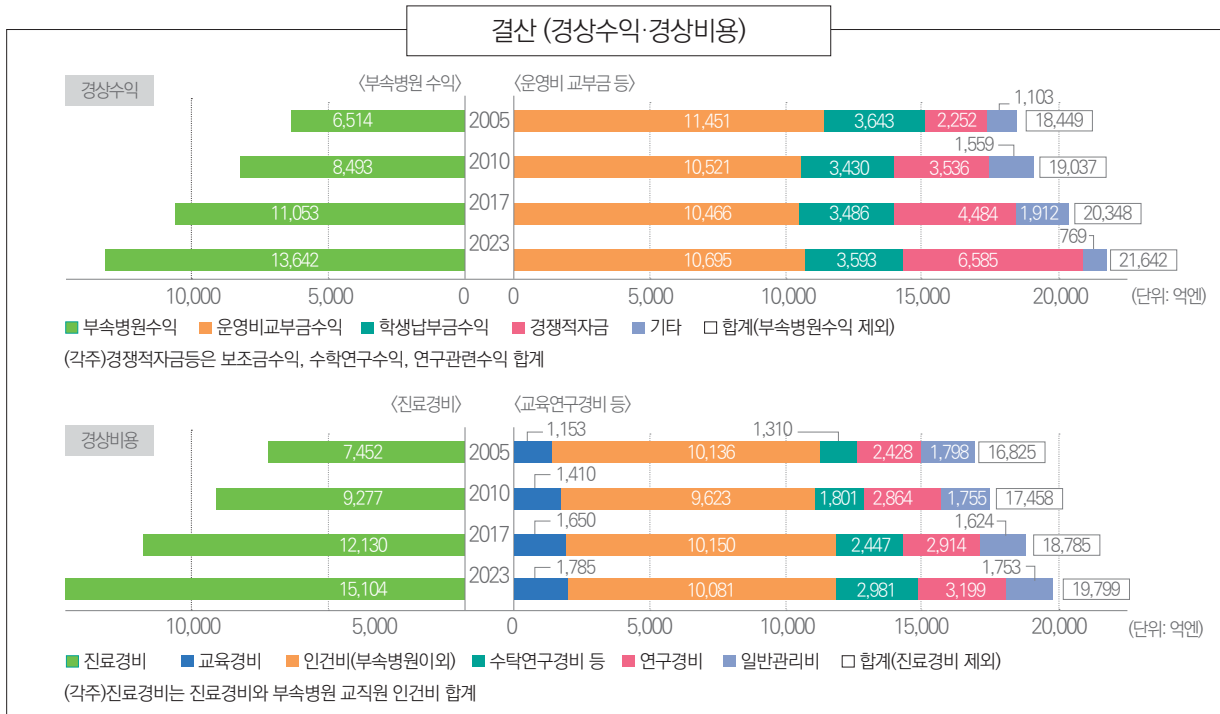
-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기존의 국립학교특별회계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국립대학법인회계제도(기업회계원칙 준거)가 도입되었으며 국가 행정조직에서 독립된 대학 법인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인 운영비교부금 제도가 신설됨
- 문부과학성은 법인화 이후 대학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교부금 총액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으며(2004년 대비 2025년 기준 약 1,600억 엔 감소), 이로 인해 대학들은 수익구조 다변화(외부 자금 유치 등) 압박을 받게 됨



[그림 1]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추이

출처: 국립대학협회(2025) 데이터로 보는 국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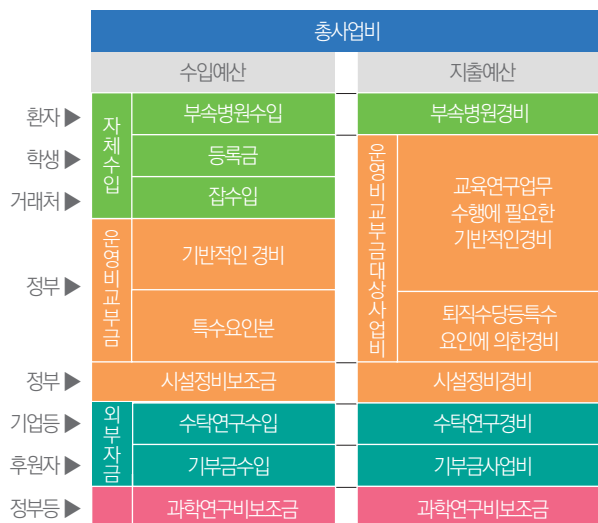


[그림 2]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추이

출처: 국립대학협회(2025) 데이터로 보는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의 수입지출 구조

- 수입구조: 정부의 기반 경비인 운영비교부금, 시설장비보조금과 대학 자체 수입(등록금, 부속병원 수입), 그리고 외부 자금(수탁연구비, 기부금, 과학연구비보조금 간접비)으로 구성됨
- 지출구조: 인건비, 교육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반 경비, 부속병원 경비, 수탁연구 및 기부금 사업비 등으로 매년 세입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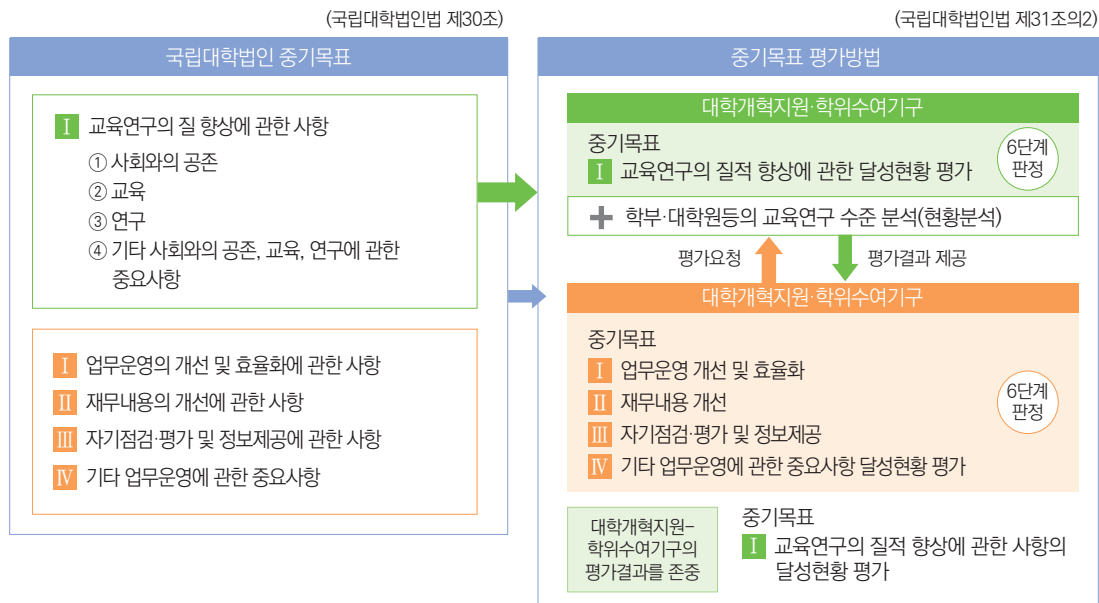


[그림3] 국립대학법인 수입지출구조

출처: 京都大学 Financial Report 国立大学法人会計の仕組み.

6년 주기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법인법」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6년 주기의 중기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중기목표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은 ①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업무 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 ③ 재무 내용의 건전성 개선, ④ 자기점검·평가 및 정보 제공 등임
-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독립 기구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위원회가 전담하며 대학의 계획 달성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지표(3단계 판정), 중기계획(5단계 판정), 중기목표(6단계 판정)로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기 운영비교부금 예산 증감에 반영하는 체계임



[그림4] 국립대학법인 평가체계

출처: 문부과학성(2024). 국립대학법인제도·데이터에 관한 참고자료.

중기목표 주기별 운영비교부금 정책의 4단계 변천 과정

- 문부과학성은 6년 주기의 중기목표·중기계획 평가 결과를 운영비교부금 배분과 연동시키며 다음과 같이 주기별로 국립대학 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제1기 중기목표기간 (2004년 ~ 2009년)**: 제도 안착 및 재정 효율화 추진
법인화 초기 단계로 민간 경영 기법 도입과 거버넌스 정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고 교육연구경비를 매년 1%씩 의무 삭감하는 효율화계수와 부속병원의 수입 2% 증대를 전제로 교부금을 차감하는 경영개선계수를 도입하여 국립대학법인의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초래하였음
- **제2기 중기목표기간 (2010년 ~ 2015년)**: 대학개혁 촉진계수 도입

문부과학성은 일률적 삭감이 대학의 역량을 과도하게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효율화·경영개선계수를 폐지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 재편과 체질 개선을 직접 유도하기 위해 대학개혁촉진계수를 신설함. 이는 각 대학의 일반 운영비교부금(인건비 등



기반 경비)에서 매년 1~1.4%를 일괄 차감하여 별도의 정책 기금을 조성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화나 학과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만 특별운영비교부금 형태로 재교부하는 선택적 환류 구조를 취함

● 제3기 중기목표기간 (2016년 ~ 2021년): 대학 기능별 3개 유형화 및 정량 공통지표 도입

획일적인 경쟁 체제가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국립대학을 강점과 특성에 따라 지역형(지역 활성화 중추), 분야형(특정 학문 세계 수준 견인), 국제형(전 분야 글로벌 최고 경쟁력 확보)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그룹 내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함. 아울러 '기능강화촉진계수'를 신설해 일반 교부금의 1%를 삭감·조성한 재원으로 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교부금을 차등 배분함. 특히 2019년부터는 주관적 성향이 강한 정성평가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외부 자원 확보율, 교원 인사 개혁 성과 등 정량적 공통지표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정교하게 차등 배분하는 성과주의 체계를 고도화함

● 제4기 중기목표기간 (2022년 ~ 2027년): 성과중심 배분 제도 고도화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매년 실시하던 연도 평가를 폐지하고, 교육연구 실적과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1,000억 엔 규모의 성과중심 배분 제도를 도입함
- 성과중심 배분 제도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영 마케팅 개혁 추진과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대학의 개혁 노력과 교육, 연구, 경영 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구조임
-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데 대형 대학이 정량평가를 독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실적과 과거 대비 성장세를 1:1의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평가는 교육영역(2), 연구영역(3), 경영 마케팅 개혁 영역(6) 1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지원 실적, 연구영역에서는 청년 연구자(만 39세 이하) 고용 실적, 경영 마케팅 개혁 영역에서는 기업 등으로부터의 공동·수탁 연구비 획득 실적, 민간 외부 자금 중 간접비 비율, 기부금 등 자체 경영 자금 획득 실적, 연봉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혁, 타 대학, 기업, 연구소와 겸직하는 교원 수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IV. 법인화의 성과와 부작용

- 2004년 일본 국립대학이 법인화된 지 22년이 지난 현재, 일본 고등교육계 내부에서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빛과 학문 생태계 황폐화라는 그늘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학 총장들의 70%가 법인화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보일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아사히신문 설문조사 2024.4)
- 긍정적 성과
 - 대학 자원 다변화·유연한 인사제도와 신속한 의사결정: 국가 공무원법의 강력한 제약에 묶여 있던 대학 교직원의 신분이 법인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성과와 능력에 연동된 유연한 인사·급여 제도(연봉제 등) 도입이 가능해졌음. 또한 과거 관료제적 합의 체제에서 벗어나 총장 리더십 하에 경영협의회의 전문성을 결합한 신속한 톱다운 방식의 대학 경영이 정착됨
 - 수익구조의 다변화: 지속적인 정부 교부금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국립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함. 정부 역시 대학의 채권 발행 허용, 유휴 캠퍼스 부지 상업 임대 비과세 요건 완화,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를 뒷받침함. 그 결과, 법인화 이전에 비해 전체 국립대학의 경상수익은 무려 2.2배(6,245억 엔 → 1조 4,148억 엔)로 증가하였고, 민간 외부 자금 유치 규모는 4.3배(1,718억 엔 → 7,521억 엔)로 폭발적으로 신장하였으며, 발전기금 기부금 수익 역시 1.8배 증가하는 등 정부 의존형 수동적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경영 성과를 거둠.
 - 유형별 목표 정립과 기능적 분화: 각 대학이 선택한 '지역형', '분야형', '국제형' 목표에 맞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투입함으로써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능별 분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됨

● 법인화 부작용

- **기반 경비축소로 인한 교육·연구 인프라 황폐화**: 매년 구조적으로 집행된 운영비교부금 삭감 정책의 결과, 2004년 법인화 당시 1조 2,415억 엔이었던 교부금 총액은 2025년 기준 1조 784억 엔으로 약 1,632억 엔(13% 이상)이 감소됨. 이러한 재정 결핍은 대학 현장의 고통으로 이어져, 천장에서 비가 새는 실험실을 방지하고 고장 난 학생 화장실을 수리하지 못하며,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야간 소등을 강제하는 등 국립대학의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함
- **행정 부담 증가와 정규직 교원 감소에 따른 연구력 저하**: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83%가 “연구 의욕과 동기가 전보다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답변함. 원인은 정부의 복잡한 중기 평가 대응, 경쟁적 외부 공모과제 수주 및 정산 업무 등으로 인해 교수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임. 더욱이 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규직 신진 교원 채용을 동결하고 단기 계약직 교원만을 양산하면서 정규직 교원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고용 불안정을 목격한 학문 후속 세대들이 연구직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이는 실질적인 국가 연구력 지표 추락으로 직결되어, 과거 세계 2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총 논문 수는 세계 5위로 하강하였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상위 10% 논문 수는 세계 4위에서 13위로, 상위 1% 최우수 논문 수 역시 4위에서 12위로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초학문 소멸과 구제국대-지방 국립대 간 격차 확대**: 6년 주기의 성과 평가에서 즉각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고 민간 기업의 수주를 따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인 기초과학과 인문학 연구가 위축됨. 또한, 정부가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재원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막대한 민간 기부금과 대형 과제를 독식하는 구제국대학(도쿄대, 교토대 등)과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소규모 지방 국립대학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를 초래함

V. 한국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 22년 역사가 남긴 교훈과 성과 중심 운영비교부금 배분 정책의 변화 과정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30,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 평가체계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과감한 금융·재정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일본 국립대학들이 교부금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체 경상수익과 민간 외부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인화 이후 단행된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 덕분이었음. 대학의 수익사업 출자를 허용하고, 채권 발행권을 일반 국립대까지 확대했으며, 장기차입금 활용 범위를 지역혁신 및 산학협력을 위한 시설 건립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한국도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과감한 사업화, 지자체와 연계한 캠퍼스 유휴 부지의 과감한 상업적 개발 및 임대 활용 활성화, 대학 자체 채권 발행권 부여, 부속병원 수익의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금융 및 행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함
 - **둘째,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 세분화 평가 체계 구축**: 일본은 제4기 성과중심 운영비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형 대학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무기로 정량평가 지표를 독식하는 구조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대학들을 규모와 특성에 따라 6개 세부 그룹으로 철저히 분류하고 해당 그룹 내에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의 재정지원 사업은 수도권의 대형 종합대학과 지방의 중소규모 국립대학, 혹은 특수 목적 대학들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획일적인 정량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음. 대학의 규모, 조직 역량, 지자체·산업 연계 유형별로 차별화된 성과지표와 가산점 제도를 설정하고, 일본의 ‘대학개혁추진계수’나 ‘목표실현가속화계수’처럼 정책적 유도 목표와 대학의 체급을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정교한 평가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 **셋째, 절대적 실적과 과거 대비 성장세(신장률)를 1:1로 반영하는 평가 구조 도입**: 일본의 성과중심 배분 제도의 핵심은 대형 대학에 무조건 유리한 정량평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정량적 실적과 과거 평균 대비 당해 연도의 신장률(성장 추세)을 1:1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비중으로 결합하여 최종 성과를 판정한다는 점임. 한국의 대다수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평가는 현재 시점의 정량·정성적 성과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거대 대학에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과 이는



지방 소규모 대학의 동기부여를 꾀는 요인이 되기도 함. 한국도 대학 혁신을 위한 해당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과 전년 대비 신장률(노력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지방 중소 대학들도 개혁에 대등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강력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함

- 넷째, 대학의 자체 수입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교한 마케팅 지표 설정: 일본의 성과중심 운영비교부금 평가지표는 교육(2개), 연구(3개) 외에 경영 마케팅 개혁 영역에 총 6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즉, 대학원생 경제적 지원 실적(교육), 학문후속세대 고용 실적(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의 공동·수탁 연구비 획득 실적, 민간 외부 자금 중 대학 본부가 확보하는 '간접비(Overhead) 비율', 기부금 등 자체 경영 자금 획득 실적, 교원 연봉제 도입 성과 등을 반영함. 현재 한국의 재정지원 평가지표는 취업률이나 충원을 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음.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공동 연구 유치 및 외부 자금의 간접비 확보 비율을 핵심 평가지표로 적극 반영해야 함. 이를 통해 대학이 국가 재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민간 기업 및 글로벌 펀드와의 공동 연구, 수탁 과제 수주를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도록 체질 개선을 강력히 유도해야 함
- 다섯째, 단기 성과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학문 보호망 및 재정지원 제도의 법제화: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22년이 남긴 가장 큰 폐해는 6년 주기의 단기 성과 평가와 치열한 공모형 외부 자금 경쟁에 전 대학을 올인하게 함으로써 기초과학과 인문학 연구 생태계가 위축되고 국가 연구력의 저하(논문 순위 급락)를 초래하였다는 점임. 한국도 '글로벌대학 30' 등 대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경쟁적·선택적 사업비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연구 역량이 추락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학개혁을 유도하는 경쟁적 사업비와 대학의 안정적 연구 연속성 및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기반적 경비를 균형 있게 안분하는 재정지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京都大学(2009). Financial Report 国立大学法人会計の仕組み
- 文部科学省(2014). 国立大学法人化後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
- 文部科学省(2018~2024). 文部科学白書
- 文部科学省(2018). 2040年に向けた高等教育のグランドデザイン (答申)
- 朝日新聞社(2024). 限界の国立大学
- 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2024). 科学技術指標 2024
- 国立大学協会(2025). データで見る国立協会
- 文部科学省(2025). 令和7年度科学研究費助成事業の配分について
- 文部科学省(2025). 概算要求
- 文部科学省(2025). 各年度 高等教育主要事項
- 文部科学省(2025).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 文部科学省(2025). 国立大学法人等の制度・データに関する参考資料
- 文部科学省(2026). 運営交付金を取り巻く現状について

※ 본 이슈브로슈어는 연구자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